

도내 각 정당 조직정비 '젠걸음'

국민의당, 오늘부터 13일까지 지역위원장 공모 더민주, 도당위원장 원외에서 맡게 될 가능성

전북지역 각 당들이 조직정비에 쟁걸음을 보이고 있다. 도내 정치권은 전북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당의 총선 뒤를 조직 재편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다. 먼저, 국민의당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지역 위원장을 공모한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경우 다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결과에 만족하고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는 순간 국

민의당 힘 풀림이 일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 했지만 도내에서만 40여명에게 달하는 당원 수가 있는 등 지지기반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전체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우뚝 선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 내에서도 그 강도가 점점 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민의당 전북도당

내부적으로도 당원확충 등 조직정비에 적지 않게 신경 쓸 것"이라며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에서 다시 한번 불어오면 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당 위원장과 각 지역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준비위,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하는 등 전대에 필요한 실무 준비에 들어갈 계획인 만큼 이에 맞춰 본격 지역위원회 구성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0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만을 차지, 당직 대부분을 원외에서 채워야 할 상황이다. 관례대로라면 낙선자 중심으로 지역위원장

이 경우 당내 갈등 소재로 부상할 경우 조직 안정지원에서 경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당 위원장을 누가 맡을 지도 관심이다. 이춘석, 안호영 당선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춘석 당선인은 본인이 고사한 상태이며 안호영 당선인 역시 지난 8일 원내부대표에 선임된 만큼 원외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까지는 김춘진 의원 외에 김운덕, 김성주, 이상석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당 관계자는 "아직 이렇다 할 유력 후보는 없다. 중앙당 조강특이 구성되는 11일 이후 지역위원회 구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 부대표단 인선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민주, 11명 원내부대표단 확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11명으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확정 발표했다. 부대표단 모두는 20대 국회 초선 당선으로 구성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부대표단에 이훈(기획담당)·백혜련(이상 법률담당)·유동수(회계담당) 당선인을 원내부대표단에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김병욱·박정·안호영·문미옥·최인호·오용훈·강병원 당선인이 원내부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부대표단은 앞으로 당의 원내 대책을 논의하고 국회운영을 책임지며 더민주 의원과 소통을 담당할 분들"이라며 "지역과 각 세력과의 소통을 고려하면서도, 전문가들의 전문배치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훈(서울 금천) 부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기획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백혜련(경기 수원)·송기현(강원 원주) 부대표는 모두 검사 출신이다. 유동수(인천 계양) 부대표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재무전문가다. 차기 대선 주자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원주의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지명했고, 원내대변인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인 기동민·이재정 당선인을 지명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순차규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당선인을 원내부대표로 선임하면서 "유력한 대선후보와도 교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지역별 안배도 눈에 띈다. 호남에 안호영

이훈 등 포함 안호영·문미옥·강병원 등 초선으로 구성 우상호 원내대표 "지역 간 소통 고려... 전문가 전면 배치"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영남에 최인호(부산 사하갑), 제주에 오용훈(제주) 당선인이 부대표에 지명됐다. 이날 부대표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저마다의 각오를 전했다. 박정 부대표는 "성공 기업가 출신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고, 문미옥 부대표는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여야에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5월 중으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정상적인 원 구성이 되도록 협상을 서두르자"고 말했다. 또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우상호 원내서령탑 체제' 첫 원내대책회의를

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 오늘부터 선진지 벤치마킹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는 9~10일 1박2일동안 선진지 벤치마킹에 나선다. 이번 벤치마킹에서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남 순천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원도심 공동화현상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정원'과 '생태'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7년까지 총 1,4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전남 순천시의 도시재생센터와 도시재생사업현장을 방문, 순천시 담당자로부터 사업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영일 의원은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바뀌고 있지만 도시재생의 핵심 키워드인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참여형 사업추진이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순천시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가습기 살균제 국회 차원 특위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의 당정 협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청문회를 비롯한 진상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다만 늦장대응에 대한 정부 측의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국회 청문회 및 법 개정 수용은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늦었지만 새누리당이 국민과 우리당의 요구인 청문회와 관련법 개정을 수용한 것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서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는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며 "당연히 새누리당 또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동의하고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오늘 정부여당의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반성도 없었다.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즉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책임회피와 늦장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국회의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주 기자

정진석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 착수할 것"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8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및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준비를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옥시사태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의 대응은 원진제이든 사태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며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했는데 왜 복지부와 식약처 등은 갓나아가와 산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역학조사가 나서지 못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수의과 교수, 옥시 측은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실험 결과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 물질의 유독성을 어떻게 돈 때문에 은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한 점 의혹이 없이 국민 앞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복지부 등 관계당국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일어난 것인데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피해자 보상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대형종합병원 조사도 동시에 이뤄져 조금이라도 빨리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성주 기자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친박' 김도읍 내정

8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친박계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이 내정됐다.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도읍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여야 타격을 기다리고 있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입법 전문성과 대야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김 의원 내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출신의 김 신임 원내수석은 부산 동고과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등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을 꺾고 금배지를 달았다. 19대 국회에서는 원내부대표단 세 번 역임했고, 각종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에서 빠지지 않고 활동했다. 김 원내수석은 충남 출신 정 원내대표와 경북 출신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지역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울산 출신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울산출신인데 수석은 울산 출신이 해야 한다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변인에 재선의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과 김정재 당선인(포항 북구)을 임명했다. 그는 "김명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원내대변인을 역임했고, 김정재 당선인은 원내부대변인 경험이 있어 국민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 50대인 이 분들이 당정청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고, 김정재 당선인은 이병석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포항 북구에서 '여성우선추천'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정 원내대표는 20대 당선인 워크숍이 예정된 9일까지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마무리 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주 기자

장수군 공고 제2016 - 371 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내역

구분	합계	농지면적				기타농지	비농지
		소계	답	전	과수		
계(A+B)	462.7	297.4	242.1	50.4	0.9	3.9	165.3
변경지역(A)	232.8	182.7	137.3	44.5	0.8	-	50.1
해제지역(B)	229.9	114.7	104.8	5.9	0.1	3.9	115.2
진흥구역	214.3	111.4	102.5	4.9	0.1	3.9	102.9
보호구역	15.6	3.3	2.3	1.0	-	-	12.3

○나. 변경·해제 토지 조사: 별첨
 ※ 변경지역: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해제지역: 농업진흥지역 안→밖으로 해제

□ 토지조사 열람장소
 ○ 열람장소: 장수군청 홈페이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읍·면 사무소
 ○ 자세한 문의: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농지업무 담당자(063-350-5416)

□ 열람기간: 2016. 05. 03 - 05. 16.(14일간)
 ○ 열람시간: 09:00 - 18:00(단, 휴무일 및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063-350-5416, Fax063-350-5455)

2016. 5. 3. 장수군수